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185회 임시회>

2010. 2. 25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백 진 흠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10년 2월 1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장)

3. 개정 이유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고,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라 군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이며, 2009년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세의 세율인하를 통해 완화한 납세자의 세부담을 2010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4. 주요내용은

-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함.
-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편성함.
- 2009년까지 완화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1.4로 금년 말까지 연장함.

5.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09년 도시계획세의 한시적인 세율인하를 2010년 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군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되,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종업원할’ 을 ‘종업원분’ 으로, 주민세에 해당하던 ‘소득할’ 을 ‘소득분’ 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방소득세로 신설하는 것이고, 기존의 주민세에 포함되던 ‘균등할’ 을 ‘균등분’ 으로 하고 사업소세였던 ‘재산할’ 을 ‘재산분’ 으로 명칭 변경하여 주민세로 하는 것임.
즉, 신설되는 지방소득세는 소득과세로서의 성격이 강한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세의 통합이므로 세목의 신설 폐지가 아닌 기존 세목의 분합임.
- 따라서 기본 소득할주민세·종업원할사업소세의 단순한 명칭변경이므로 과표와 세율, 부과징수 체계 등은 현행과 동일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과 군 세입 증가는 없음.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세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계 법 령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 삭제 <1988.4.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10년 2월 1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장)

3. 개정 이유

-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 감면범위의 축소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과 「자동차관리법」의 화물자동차와 「지방세법」의 화물자동차 규정 불일치에 따른 납세자 세부담의 완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 연금관리법에 따라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4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만을 면제하도록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과,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5.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법률간 규정된 과세대상물의 차이로 인한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 연금관리법에 따라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4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에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계획세만 면제하도록 개정하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의 각호 삭제에 따른 감면조례 제28조제2항의 인용조문을 수정하며,
-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로 적용하는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가 주로 영업용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감면조례를 통해 2010년에 화물자동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0년 상반기 중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법률상 세액 감면의 명문화된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임.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10년 2월 1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장)

3. 개정 이유

-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기한 민원서류 접수 시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 하였으나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증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4. 주요내용은

-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구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된 조례를 개정하여,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 로도 납부 가능하도록 함.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각종 민원서류 발급 및 접수시 소요되는 수수료를 현금 이외의 신용·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2. 개정안의 타당성 검토

- 민원 서비스의 사용자인 민원인의 편익을 최대한 감안하였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지불 방법의 다양화를 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37조 (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10년 2월 1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장)

3.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권고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수수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은

- 각종 제증명 등 발급에 따른 수수료 납부 방법을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 로 규정함.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증명 등의 발급시 민원인의 수수료 지불 편의를 위해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개정안의 타당성 검토

- 민원인을 행정의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닌 서비스의 또 다른 주체로 보고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서 수수료의 결제 방식을 다양화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